

사회진보연대 발행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 북구 신안동 135-7 SJ빌딩 2층 민중행동 | www.pssp.org/gr | pymjhd@gmail.com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580-27 2층 | www.pssp.org/ic | icpssp@jinbo.net

시간-노동과세계 변백선



총선 민심 못 읽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정국 수습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만나는 간담회를 연 데 이어 5월 초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는 정국수습의 방향을 암시한다. 그녀는 “서로 밀고 당기며 되는 것도 없는 양당체제 식물국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들이 3당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라 말했다.

한 마디로 총선결과는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식물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발 정책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재벌 특혜 규제프리존

총선이 끝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길이 나온다’는 극도로 단순한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총선 직전 두 종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기업 업종별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선거참패로 전경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나? 그렇지 않다.

현재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 해당지역에서 핵심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의 모델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법인세 인하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다. 바로 이 규제프리존이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뚫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집단 지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대로 가져가는 건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의 요구를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매력적인 노동시장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려 경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시장도 매력적이지 않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다 도망가지 않겠냐”고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얼마나 더 무권리 상태로 떨어뜨려야 노동시장이 매력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나?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양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관련 정부지침)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확고한 만큼, 경총은 총선 후 <양대 지침 경영계 가이드북>으로 화답했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조 파업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라고 기업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총이 이처럼 법적 근거가 박약한 주장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힘은 오직 박근혜 정부에서 나올 뿐이다.

이미 실패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는 지극히 단순한 도식이 이미 실패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로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나아가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고환율(원화 가치 절하)을 유지하여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고통을 무릅쓰고 수출대기업을 지원했다. 그에 따라 수출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지만, 고용은 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런 실패 경험은 전혀 없었다는 듯, 시간이 갈수록 맹목적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치닫고 있다.

3당체제, 보수기조로 기우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3당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 “경제활성화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힘이 돼주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에는 새로운 3당체제 국회가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미묘한 기대가 담긴 것일까?

기실 사회진보연대는 총선 전부터 더민주·국민의당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수화 기조를 우려했다. 더민주를 김종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원내활동을 보수기조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더민주 다수인 친노/386 집단은 대선국면을 염두에 두며 방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당은 선택적 협조라는 태도로 오히려 새누리당과 합작하여 더민주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과연 기우일까?

4월 27일 현재,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전당대회 연기, 곧 그의 대표 체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김종인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총선 후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목소리가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종인 대표는 4월 20일,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대표의 측근인 최운열 국회의원 당선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민주의 기존 당론과 정면충돌하는 입장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의 정책,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예측하

기 어렵다. 예측불가능성이야말로 두 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 즉 두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을 표변할 수 있다는 지표다.

기업구조조정,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민주의 대변인 브리핑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 일가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부실을 방관한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대량 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민주가 정부 대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듯 보이지만 실상 정부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들은 고용유지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업·대주주, 정부·채권단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실업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조선업 대기업이 호황 시기에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을 볼 때, 대주주는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갔다. 하

지만 불황의 기미가 나타나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라는 건 인력감축 곧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급여체계 개편, 즉 노동자 임금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대주주와 정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미 막대한 이익을 누린 대주주와 이를 방조한 채권단·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총선에서 표출된 열망을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가자

2016년 총선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변화 욕구가 표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완고한 정책방향이나 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면, 현 정세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제 노동자운동은 진정한 변화를 향한 희망을 운동으로 조직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야당이 공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논리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이란 요구에 걸맞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근거로 투쟁대오를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사업장이 밀집한 7개 공단에서 2016년 3-4월 민주

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40%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와 무관한 취업규칙 변경이 자행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정기상여 지급규정 제한, 수당 삭감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10대 재벌이 고용한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재벌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다. 재벌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최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노조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을 구성해 실질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짜 사장’ 원청 재벌이 더 이상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총선이 끝난 초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느냐가 향후 정세를 결정할 것이다. 오늘 메이데이 투쟁을 시발점으로, 6-7월까지 노동자 투쟁 역량을 집중하여 커다란 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

노동자 쥐어짜는 구조조정을 멈춰라!

부실경영과 구조조정 광풍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4월 26일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업종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과 해운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조선업종은 대형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운업종은 용선료 인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금융시장 지원, 노동4법의 조속한 통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는 구조적 불황에 단기적 수익 추구로 대응한 부실경영의 책임이 크다. 조선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사내하청에 의존한 저가 수주와 공기 단축을 통해 이익을 내는 기존의 영업방식을 추구하다가 부실화 되었다. 해운업도 호황기 단기성과에 급급해 고가의 용선료를 주고 배를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 손해를 보았다.

손실을 전가하려는 시도

이러한 경영실패에 대해 소유주와 경영진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다. 정부가 요구하는 각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도 임금·복지 삭감,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에게 손실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미 현장은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있고 추가 인력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계급투쟁은 일부 부실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총체적인 수익성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제정된 원샷법(기업활동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까지 주는 반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 올해 효력이 연장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한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반면 노동조합은 채권단의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노동개약 4법 또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일상적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만든다.

구조조정과 노동개약에 맞서 단결된 투쟁을

이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과제는 분명하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정부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동개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산업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재벌에 맞서 직접 투쟁하고 교섭하며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노동개약과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자신있게 펼쳐나가자!

공공부문 성과임금, 퇴출제 저지 투쟁 민주노총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

노동개악과 공공성 파괴

박근혜 정부는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통한 노동개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에서 개악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만큼, 다른 곳에서 성과를 내려한다. 2대 지침에 이어, 공공기관,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 성과임금(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요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대통령직접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쟁기겠다고 나섰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퇴출제 확산은 노동자의 일터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성 파괴로 직결된다. 단기간의 실적내기와 상급자 눈치보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와 생명, 안전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민영화에 이은 공공성 파괴 정책이다.

투쟁을 결의한 공공부문 노동자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 의료노조)은 "공공성 파괴하는 성



(사진=공공운수노조)

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성과연봉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건강보험, 가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산하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전조합원 서명운동 등 조직화와 함께 교섭권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지부가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성과급반납투쟁과 대정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6월 투쟁을 예정하고 있고,

9~10월에 더욱 큰 공공부문 노동자의 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연대전선을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노조들은 2014~15년을 거치면서, 복리후생 삭감과 임금피크제 저지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그러나 연대전선이 무너지면서 결국 패배한 경험이 있다. 올해에도 연대전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벌써 한국노총의 산하 전력, 농어촌공사노조 등이 성과연봉제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패배로부

터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타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핑계를 대는 순간 함께 패배한다. 오히려 "다른 곳이야 어떻게 우리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현장으로부터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 결의가 모이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으로 뭉치자

정권이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를 강요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체 노동자들에게 노동개악을 확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전체 투쟁일정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투쟁을 엄호해야 한다. 그 출발은 여러 공공부문 산별노조의 투쟁을 총연맹이 묶어내고 주도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개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만큼, 역설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은 총선 이후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미 핵전쟁훈련 저지 · 핵무기실험 중단 동아시아 평화와 비핵화를 요구하자



한반도의 핵 위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행해진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핵무기는 적, 아군 구별 없이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를 낳는다.

또 핵보유 자체가 전쟁 유발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 시도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 협박과 연습을 해온 미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사적 압박이 그것이다.

전쟁위기 고조하는 한미일동맹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진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실시되었다.

미국이 이번 훈련에 동원한 이른바 '5대 전략자산'은 모두 적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일본은 3월 29일,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안을 발효시켰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공공연히 군사력 강화와 해외 군사 활동을 피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잠재적 경쟁대상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압박하고자

한다. 여기에 북한의 위협은 좋은 구실이 된다. 각국 정부는 말로는 평화와 전쟁 억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군사력 증강 자체가 북한의 핵 무장을 촉진하고, 동아시아의 전쟁과 갈등을 낳는 원인이다.

평화를 위해 노동자가 나서자

노동자가 나서서 평화운동에 앞장서자. 지금까지 정부와 지배세력은 안보 공포, 색깔론을 들먹이며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탄압해왔다.

민중들은 전쟁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일군사협력 반대, 사드배치 저지로 반전, 반핵, 평화를 외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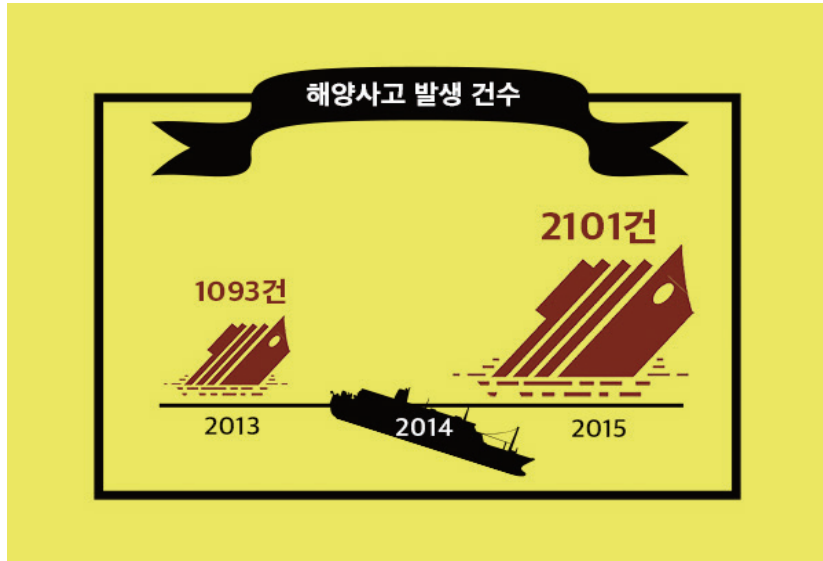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지금 한국은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최근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가 도리어 늘고 있다. 2013년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307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395명으로 늘었다. 2013년 해양사고는 1,093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2,101건에 달했다. 연안여객선 사고 역시 2014년 51건에서 2015년 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안여객선 사고 중 기관손상에 의한 사고가 2014년부터 크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노후화나 정비불량 및 관리소홀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2014년, 304명이 희생당하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는 여전히 침몰하는 한국호(號)에 타고 있다.

세월호와 안전대안

세월호는 애초 안전한 배가 아니었다. 불법 증개축으로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4월 15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실었으며 고정



도 제대로 안 한 채 인천항을 떠났다. 해경이나 항만청 모두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부실고박과 과적을 사전에 단속할 역량도 없었고, 정부는 이를 규제할 의지도 없었다. 연안여객선 중 노후 선박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해상사고 위험이 높아지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선령 규제를 완화시켰다.

문제는 그런 '세월호'가 세월호 한 척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후선박이 지금도 전체

연안여객선의 35%나 된다. 안전사고를 유발한 기업처벌 문제는 또 어떠한가? 기업과 사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없다. 해운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청해진 해운에 부과할 수 있는 죄값은 1,000만 원이 전부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안전한 배를 만들고, 선원 교육 훈련, 안전 운항 준비를 의무화하는 것이 안전 대책 마련의 기본이다.

또한 노후선박 제한, 안전 점검 등 선박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중대재해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로의 대전환

우리는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416이후 다른 한국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진실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검을 실시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며,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

416 이전과 다른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선박 안전성 기준을 높이고 과적·과승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자.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및 노동자·시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지.

사회운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함께 나아갑시다.
월간 <오늘보다>를 구독하세요!

월간 **오늘보다**

구독신청서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납부 방법 계좌이체 (1년 3만원) CMS 정기납부 (매월 3천원)

*이름 내용은 CMS 정기납부자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정기구독자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우측 신청서 빈칸을 채워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ID 오늘보다에게 보내주세요!
정기구독료 연 4만원 / 월 4천원
하나은행 771-910262-87007 정영섭

✉ today.boda@gmail.com
🏠 todayboda.net/subscribe
☎ 02-778-4001

※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 단체구독 환영

성찰과 실천, 비판과 대안

사회운동학교

2016 여름 강좌

미르크스·엔겔스 저작선 함께 읽기-입문편(5강)
한국의 노동법: 노조탄압과 노동유연화의 역사(4강)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사와 한반도 정세(3강)

시작일 | 6월 중순(6/21-7/22)
장소 | 사회진보연대 교육장
사회운동학교 수강생 카페 | cafe.naver.com/readred
수강문의 | 02-778-4001~2, pssp4001@gmail.com